



과학의 대중화와 합의

허 두 영

<서울경제> 산업1부 차장

과학은 합의를 싫어한다. 수백만명의 보통 사람들이 모여 만장 일치로 합의 하더라도 아인슈타인 같은 탁월한 과학자 한 사람의 이론을 당해낼 수 없다. 진리나 진실은 결코 합의로 결론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은 합의를 좋아한다. 재갈공명 같은 걸출한 전략가가 제아무리 앞서가는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절대 다수가 반대하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책은 합의가 최선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학과 관련된 정책은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이 어려운 과학의 전문 영역에서, 정책에 대한 판단은 거의 절대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대중은 소외되기 십상이다.

김진현 과기처 장관(재임 1990~1993년)은 역대 과기처 장관 가운데 과학 대중화에 남다른 관심을 쏟은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학기술진흥재단(과학문화재단의 전신)이 과학 대중화 정책에 대해 발간한 보고서는 대부분 김 장관 시절에 기획된 것이다.

「과학 기술 국민 이해 사업」도 이 때 등장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명칭부터 잘못 정했다. 정부가 과학 기술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당시 과학 기술 국민 이해 사업은 안면도 사태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원자력

에 대해 무식한(?) 국민을 계몽시켜야겠다는 필요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민이 과학 기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이해시키겠다는 잘못된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원자력이 과학 기술적으로 안전하다하더라도 정치적인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하고, 경제적인 사업성이 타당해야 하며, 환경과 고용 등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치·경제·사회의 총체적인 문화다. 정부가 두 섬(안면도와 굴업도)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사업을 백지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경제·사회의 총체적인 문화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부터 과학 기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굳이 권위적인 뉘새를 풍기는 과학 기술 국민 이해 사업을 벌이지 않더라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으로 과학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들어 유럽에서 시작하여 미국과 일본으로 확산되고 있는 '합의 회의(Consensus Conferrence)'가 그 좋은 본보기다.

합의 회의는 정부가 전문적인 과학 기술 관련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과학 기술 전문가가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과 동떨어진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곧, 배심원으로 선정된 보통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일으키는 과학 기술적인 주제에 대해 전문가에게 묻고 답을 들은 뒤 의견을 모아 발표하는 일종의 포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합의 회의는 나이·성·학력·직업·지역 등 각계 각층에서 선정된 보통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정리한 의견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영국·덴마크·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는 80년대말부터 대기 오염·가상 현실·유전자 조작·불임 치료·전자 주민 카드·교통 정보 기술·식품 방사선 처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합의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 국가는 동물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고, 인력 채용에 유전자 검사를 이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교통 신호 체계 정비에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기술을 개발토록 했다.

또 합의 회의는 정부의 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참여한 배심원은 물론 언론을 통해 이를 지켜본 일반 대중도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힌 것으로 나타나, 과학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합의 회의는 최근 동물 복제 사건·유전자 조작 식물·'천국의 문'과 같은 인터넷 광신도의 집단 자살 등 과학 기술과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 과학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에도 합의 회의가 곧 등장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생명 공학의 발달에 따라 제기되는 윤리·사회·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생명 윤리·안전에 관한 합의 회의를 11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7월 중 합의 회의



원자력이 과학 기술적으로 안전하다하더라도 정치적인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경제적인 사업성이 타당해야 하며, 환경과 고용 등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합의 회의는 정부가 전문적인 과학 기술 관련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과학 기술 전문가가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과 동떨어진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곧, 배심원으로 선정된 보통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일으키는 과학 기술적인 주제에 대해 전문가에게 묻고 답을 들은 뒤 의견을 모아 발표하는 일종의 포럼이라고 할 수 있다.



에 참여할 일반 시민 패널 10~15명을 공개 모집하여 시민 패널을 구성했다.

시민 패널은 8월부터 모임을 갖고 전문가로부터 생명 공학과 생명 윤리, 안전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된다. 시민 패널은 11월에 사흘에 걸쳐 합의 회의를 진행한다.

첫째날은 패널이 만든 질문에 대해 전문가가 답변과 의견을 제시하고, 둘째날은 패널이 추가 질문을 통해 각 주제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작성하며, 셋째날은 기자 회견을 갖고 의견서에 대해 발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이번 합의 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가톨릭대학 이영희교수팀과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정치인·언론인·교수·법조인 등 여론 주도층 200명을 대상으로 생명 공학과 생명 윤리, 안전 분야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지한 대중을 일방적으로 개화시키려는 계몽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 과학 기술자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진정한 과학 대중화를 지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부터 깨달아야 한다. ☞